

“대전을 사람의 만남이 아름다운 도시로 만듭시다”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백경원 042-331-0092, 010-6406-7949)  
제 목 사회양극화(빈곤·노동분야) 실태조사 결과 발표  
날 짜 2006년 4월 26일(총 3장)

## 보 도 자 료

### 사회양극화 실태조사(빈곤,노동 분야) 발표

## 대전시, 빈곤층의 증가 및 비정규직에 따른 근로빈곤층 양산

1. 경제가 성장하면 그 결과가 빈곤층에게도 자연스레 분배된다는 성장우선주의 논리가 여전히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성장정책은 평등한 분배를 가져오지 못 하며 우리 사회의 양극화현상과 빈곤이 또 다른 빈곤을 야기하는 도미노 붐을 심화시키고 있다.

2. 이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인권운동본부는 우리지역의 사회양극화 실태진단을 위해 빈곤·노동·의료·교육의 분야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 지역의 양극화 현상이 지속적으로 진전되고 잠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빈곤부문>

3. 우리 사회의 빈곤의 규모는 전체 인구 대비 11.4%이며 이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가 3.1%, 생활보장비수급빈곤층 4.3%, 소득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의 잠재적 빈곤층이 4%를 차지하고 있다. 대전의 경우 절대빈곤층인 수급권자가 2003년 말에 3만 8천명, 2004년 말 4만 명, 2006년 2월에 4만 4천명으로 연 2천여 명씩 기본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 비율 또한 급증하고 있다. 또한 준빈곤층인 차상위계층이 2005년 말에 조사된 결과 1

만 6천명으로, 결국 우리 지역사회의 빈곤층 규모는 총 6만 명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

4. 빈곤층은 경제수준이 최저선인 만큼 주거, 사회보험, 고용의 실태 또한 최저선에 웃돌고 있다. 소득계층별 사회보험 사각지대 분포를 보면, 전국적으로 빈곤층의 공적연금과 고용보험은 약 10명 중 8명이, 산재보험은 10명 중 6명이 미가입되어 있다.

또한 자신의 집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전국 평균 21%인데 반해 대전은 6.1%에 불과하며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26.4%이다. 이 중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세대 중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는 수급자가 10%에 달하며 체납으로 인해 퇴거하는 비율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고용에 있어서도 빈곤층은 일용직·임시직 노동자로 전전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다고 소득이 상승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 하다. 2002년부터 2004년간 수급자 취업현황을 보면, 상시고용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반해 비경제활동인구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상용직일 경우 빈곤층은 1.8%를 차지하는데 반해 비빈곤층은 30.7%이며 실업자의 비율도 빈곤층은 22.4%인데 반해 비빈곤층은 4.7%로 빈곤층일수록 고용불안정이 높음을 알 수 있다.

#### <노동부문>

5. 노동분야에서 사회양극화를 살펴보면,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 비정규직의 증가, 그에 따른 근로빈곤층이 양산되는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전국 평균에 비해 대전의 경제활동인구율이 58.2%로 낮고 실업률은 4.7%로 서울에 이어 인천과 함께 두 번째로 높다.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현황을 살펴보면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전체 취업자 대비 34.5%로 2십 2만 명의 비정규직이 있으며 이는 전체 평균보다 3% 높으며 전국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다.

6.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만큼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정규직의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며 비정규직은 임금격차와 사회보험 미가입으로 아무리 일해도 벗어날 수 없는 근로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대전의 경우 임시일용종사자가 상용종사자 임금의 50%도 안 되며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임시일용직 종사자 8천여 명이 6십 5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기존의 빈곤계층이 노동을 비롯한 사회영역의 불평등으로 빈곤이 대물림되는 현상과 비정규직의 증가 및 그에 따른 근로빈곤층의 양산은 결국 우리 사회가 빈곤의 문제를 개개인이 해결할 수도, 경제적 활동으로 극복할 수도 없는 구조임을 보여주고 있다.

8. 한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오늘(26일) **빈곤과 노동**에 대한 사회양극화 실태조사결과

발표에 이어, 내일(27일)은 **교육과 의료 분야**에서 나타나는 사회양극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5월 2일에는 사회양극화에 대한 대안으로 5.31지방선거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본 자료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http://www.cham.or.kr)/주요이슈방)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 주요문의는 백경원 간사(042-331-0092)에게 연락바랍니다.

※ 첨부자료 : 빈곤·노동분야 사회양극화 실태조사 결과 1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인권운동본부 김형돈

## 별첨자료 1 / 빈곤·노동분야 사회양극화 실태조사 결과

---

### 1. 빈곤

#### 1) 빈곤층의 증가

- 절대빈곤층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가 연 2천여명씩 증가
- 수급권자 비율이 5개 구 중 동구가 전체인구대비 5.41%로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임

#### 2) 준빈곤층의 등장

- 비수급빈곤층(4.3%)과 잠재적 빈곤층(4.0%)이 전체 인구 대비 8.3%를 차지함.(잠재적 빈곤층은 차상위계층으로 최저생계비 120% 소득자를 지칭함)
- 대전시가 2005년 12월 말 조사한 결과, 차상위계층인구 수가 16,69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를 차지함.
- 대전시가 타 지역에 비해 빈곤율이 낮은 편이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 필요

#### 3) 최저선에 웃도는 생활실태

##### (1) 사회보험 미적용

- 전국 빈곤층의 공적연금과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10명 중 8명, 산재보험은 10명 중 6명임
- 이 비율로 추정할 경우 건강보험을 제외한 3개 사회보험에서 3만 명 이상이 미가입 상태임.

##### (2) 주거의 불안정

- 영구임대주택거주자가 26.4%로 가장 높으며 자가거주자는 전국 평균이 21%인데 반해 6.1%로 매우 낮은 수치임.
-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중 관리비 체납 비율이 10%(2005년 6월)로 나타났으며 2003년~2005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3) 고용불안정

- 수급권자 중 상시고용비율은 0.9%이며 일일고용은 13.3%로 나타났음.

### 2. 노동

#### 1) 실업률

- 경제활동인구율(취업자+실업자)이 58.2%이고 이 중 실업률은 4.7%로 전국에서 2위를 차지함.
- 2005년~2006년의 1년 사이에 15세 이상 인구가 2만 명이 증가하였으나 이 중 1

만 명만이 취업을 하고 1만여 명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음.

## 2) 비정규직의 증가

- 임시근로자+일용근로자가 전체 취업자 대비 34.5%로 2십 2만 명으로 부산, 서울, 인천 다음으로 4위에 이름.

## 3) 비정규직의 근로빈곤층화

### (1) 임금격차

- 상용종사자와 임시일용종사자의 임금격차가 좁혀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상용종사자의 임금이 낮아지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임.
- 임시일용직 중 도매 및 소매업 종사자가 상용종사자 임금대비 39.7%에 미침.

### (2) 사회보험 미가입

- 전국 평균,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이 30.33%이고 유급휴가는 14.19%로 매우 저조함.

## I. 빈곤

### 1. 절대빈곤층의 증가

- 절대빈곤층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생계비를 보장받는 인구집단을 나타냄. 이들은 단순히 최저생계비 정도의 경제적인 수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료·교육·문화 등의 사회전반에 있어서 최저선에 속하게 되면서 빈곤이 대물림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됨.
- 대전은 6% 상회하는 전북·전남지역에 비해 절대빈곤율이 2.8%로 낮은 편이지만 전국 평균이 2.9%인 점을 미뤄본다면 좋은 편은 아님.

<표 1> 지역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

(단위: %)

평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9	1.7	3.2	3.2	2.3	3.8	2.8	1.6	1.8	3.9	3.7	4.1	5.9	6.7	4.6	3.2	3.7

· 주: 수급률 = 지역의 수급자수/지역의 전체인구 × 100

· 보건복지부, 2005년 07월, 「200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대전시가 타 지역에 비해 수급률이 낮은 편에 속하기는 하지만 매년 2천여 명 정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2006년도 2월 말에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수급자 현황이 44,574명으로 나타났음.

<표 2> 대전광역시 수급자 현황

(단위: 명, %)

년도	전체 인구 수	수급자 현황	대전인구대비(%)
2003	1,374,405	38,386	2.7
2004	1,424,088	40,415	2.8
증감	49,683	2,029	0.1

· 대전광역시, 2003년, 2004년 12월 말 통계기준

· 보건복지부, 2004년 06월, 2005년 07월, 2003년 · 2004년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수급자 현황을 구별로 나눠보았을 때, 동구가 12,782명으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구 전체 인구 대비 5.41%로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lt;표 3&gt; 대전광역시 구별 수급자 현황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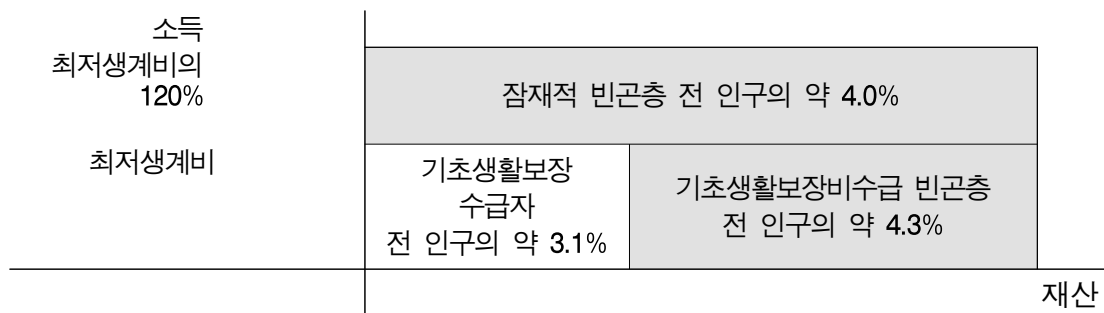
구분	전체 인구 수	수급자 현황	전체 인구 대비
동구	236,054	12,782	5.41
중구	267,698	10,293	3.84
서구	511,101	9,504	1.85
유성구	223,023	4,002	1.79
대덕구	224,659	7,993	3.55

- 주: 전체 인구 수 - 2005년 12월 31일 기준  
수급자 현황 수 - 2006년 2월 말 기준
- 대전광역시 기획관리실, 2005년 12월, 대전시 주민등록 인구통계
- 대전광역시, 2006년 2월, 대전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

## 2. 준비곤충의 등장

- 준비곤충은 차상위계층이라고도 하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약간 웃돌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호를 받지 못 하여 언제든지 절대빈곤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은 집단층임. 또한 사회적 안정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IMF 이후 사회전반에 대한 불안정함으로 인해 기존의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몰락하면서 차상위계층이 더 두터워지는 양상을 띠.
- 김미곤은 2000년 「기초보장사각지대 해소방안」(2003, 보건복지포럼)에서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과 잠재적 빈곤층을 포함하여 8.3%로 추정하고 있음. 비수급 빈곤층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 포함되는 비율은 4.0%를 차지함. 또한 노대명은 「양극화시기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의 당면과제」에서 차상위층을 전체 가구원 중 3.6%를 차지한다고 보고 있음.

&lt;그림 1&gt; 저소득 가구의 구성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2003, 10, 『보건복지포럼』 「기초보장사각지대 해소방안」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빈곤위험계층(여기서는 준빈곤층과 같은 의미로 봄)을 7.3%로 전체 인구의 3,525,385명으로 추정함. 이를 대전시 인구(2005년 12월 말 기준)에 적용해 본다면 106,736명으로 나옴.

&lt;표 4&gt; 빈곤위험 계층 및 사각지대규모 추정

(단위 : 명,%)

	계층규모	전인구대비 비율
수급자(A)	1,495,000	3.1
비수급빈곤층(B)	1,679,947	3.5
빈곤위험계층(C)	1,845,438	3.8
사각지대(빈곤위험기준)(B+C)	3,525,385	7.3
빈곤위험선 이하 계층(A+B+C)	5,020,385	10.5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복지환경의 변화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 그러나 대전의 차상위계층은 대전시가 2005년 12월 말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총 16,690명이며 역시나 동구가 4,275명으로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동구 4,275 / 중구 3,380 / 서구 4,222 / 유성구 1,341 / 대덕구 3,472명)
- 대전시가 조사한 차상위계층의 인구수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된 내용에 비해 차이가 많이 남. 비수급 빈곤층을 제외한 최저생계비 120%이내 범위의 규모로만 본다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4%로 보고 있는 반면 대전시는 그 규모가 1%로 측정되었음.

### 3. 최저선에 밀도는 생활실태

#### 1) 사회보험 미적용 -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 대부분의 차상위계층, 빈곤위험계층, 생활위험계층이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임으로써 생활의 불안정과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기본적 안전망에서 제외됨.
- 소득계층별 사회보험 사각지대(미가입자)의 분포를 보면, 빈곤층의 공적연금과 고용보험은 약 10명 중 8명이, 산재보험은 10명 중 6명이 미가입되어 있는 상태임.



&lt;표 5&gt; 소득계층별 사회보험 사각지대(미가입자)의 분포

(단위: %, 명)

	전체	일반	차상위	빈곤
공적연금	40.5	36.6	71.2	79.2
	100.0(12,503)	100.0(11,174)	(390)	(939)
산재보험	27.4	25.2	49.9	63.1
	100.0(7,813)	100.0(7,231)	100.0(213)	100.0(369)
고용보험	57.8	56.1	75.3	86.9
	100.0(7,737)	100.0(7,204)	100.0(206)	100.0(327)
건강보험	0.3	0.2	1.4	1.3
	100.0(26,714)	100.0(23,176)	100.0(944)	100.0(2,594)

· 주: 전체 소득계층의 %; (·)의 수자는 표본수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년, 노대명 외, 「2002년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

- 이 분포를 대전시에 적용해 볼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건강보험을 제외하고 2만 5천명 이상이, 차상위계층의 경우 1만 명 정도가 미가입되어 있는 상태로 추정할 수 있음.

&lt;표 6&gt; 대전시 사회보험 미가입자 추산

(단위: 명)

	공적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기초수급자 (40,415명 / 004.12월말)	32,007	25,501	35,121	525
차상위계층 (16,690명 / 2005년 6월)	11,883	8,328	12,568	233

· 주: &lt;표5&gt; 소득계층별 사회보험 사각지대 분포와 대전광역시 통계 수정

## 2) 주거의 불안정

- 근로빈곤층이 소득이 증가할 경우 가장 먼저 지출을 확대하고 싶은 항목으로 주거비가 3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로 교육비 21.5%, 의료비 13.4%로 뒤를 이었음. 이에 반해 총 소비지출이 75만원인 빈곤가구가 지출하는 항목은 식료품비 22만원, 주거비 11만원, 교통비 9만원, 교육비 7만원, 보건비 5만원 순이었음. 빈곤층이 요구되는 지출항목과 실질적으로 필요한 항목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음.(자료: 「한국근로빈곤층의 소득고용 실태 연구」, 200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lt;표 7&gt; 근로빈곤층 가구의 소득증대 시 지출희망 항목

(단위: %, 가구)

		저소득가구	차상위가구		빈곤가구
			차상위가구	빈곤가구	
소득증대 시 지출희망여부	예	91.8	91.8	91.7	
	아니오	8.2	8.2	8.3	
	계(수)	100(1,077)	100(389)	100(688)	
소득증대 시 지출희망항목(중복 응답)	식생활비	9.9	6.7	11.8	
	주거비	34.5	36.0	33.6	
	의료비	13.4	10.1	15.3	
	교육비	21.5	24.8	19.6	
	보육비	3.6	5.2	2.6	
	정보, 통신비	1.2	0.8	1.4	
	피복비	2.0	1.7	2.2	
	가구집기 교체	2.3	2.1	2.4	
	자동차 구입	2.6	2.8	2.5	
	여행	2.3	2.2	2.3	
	문화생활	2.3	3.0	1.9	
	기타	4.6	4.6	4.5	
	계(수)	100(1,600)	100(571)	100(1,029)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년, 「2002년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주거유형을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전세가 47.5%, 기타 30.4%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자가주거형이 21%를 차지함. 대전의 경우 기타가 28.9%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영구임대주택주거가 26.4%를 차지하였으며 전국적 평균에 비해 자가주거유형의 비율이 6.1%로 매우 낮게 나옴.

&lt;표 8&gt; 주거유형별 전국·대전현황

(단위 : %, 가구)

	계	자가	무주택									
			임차					위탁				기타
			소계	전세	월세	보증 부월 세	영구 임대 주택	소계	가정 위탁	보장기 관제공 거주자	그룹 홈거 주자	
전국	100.0	21	48.6	47.5	17.6	6.5	11.6	1.1	0.4	0.5	0.2	30.4
대전	100.0	6.1	64.6	12.9	17.5	7.7	26.4	0.4	0.15	0.2	0.05	28.9
계(단위:가구)	21,396	1,307	13,815	2,765	3,739	1,654	5,657	94	33	49	12	6,180

- 주: 2003년: 미등기·무허가 주택소유 4,274가구, 전체무료임차 37,700가구, 기타자가인정 3,302가구, 부분무료임차 154,106가구, 기타(오피스, 비닐하우스 등) 11,084가구  
 · 주: 2004년: 미등기·무허가 주택소유 5,150가구, 전체무료임차 43,837가구, 기타자가인정 4,475가구, 부분무료임차 165,108가구, 기타(오피스, 비닐하우스 등) 10,805가구  
 · 보건복지부, 2005년 7월, 「200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원으로 주택공급과 주거비용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대전시 조사에서도 영구임대주택 주거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정작 영구임대주택, 다가구매입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 가구는 전체 수급자 75만 가구의 11.6%에 불과하다고 함.(희망한국21자료 중)
- 더구나 빈곤인구의 상당수가 낮은 소득으로 인해 공과금이나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 해 거리로 쫓겨나고 있음. 임대아파트의 3개월 이상 관리비, 임대료, 임대보증금 등 체납이 지속될 경우 주택공사는 소송에 돌입하며 2년 정도의 유예기간이 주어짐. 그러나 임대료 연체자들의 대부분이 최저빈곤계층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별반 대책을 마련하지 못 하는 상황임.
-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세대 중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는 수급세대는 전국적으로 11.2%에 달하며 대전은 10.0%로 나타났음. 또한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체납 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2003년 974명, 2004년 1,079명, 2005년 1,242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lt;표 9&gt; 영구임대아파트 체납 및 퇴거세대 현황

(단위 : 명, %)

지역	단지수	2005.6월까지							
		세대수	수급자	수급세대		기타세대	기타세대	기타세대	기타세대
				체납	퇴거	체납	퇴거	체납	퇴거
총계	176	187,715	93,316	21,099	% 11.2	473	22,530	% 12.0	493
서울	31	45,828	17,862	2,190	4.8	1	3,627	7.9	7
경기	18	19,664	9,036	2,108	10.7	0	2,926	14.9	8
부산	19	26,171	14,011	2,891	11.0	239	3,723	14.2	256
인천	6	8,354	4,018	1,285	15.4	19	1,585	19.0	19
강원	9	4,361	2,444	542	12.4	3	525	12.0	4
충북	6	6,139	3,220	759	12.4	1	846	13.8	2
대전	10	12,437	5,923	1,242	10.0	100	1,386	11.1	107
충남	10	4,668	2,611	561	4.5	5	598	12.8	1
전북	9	9,315	5,979	1,357	14.6	7	1,133	12.2	6
광주	10	13,920	7,603	3,009	21.6	73	1,439	10.3	49
전남	7	5,001	2,957	763	15.3	0	708	14.2	1
대구	14	18,744	10,001	2,579	13.8	17	2,186	11.7	14
경북	13	7,244	4,417	976	13.5	0	681	9.4	2
경남	12	4,773	2,634	757	15.9	8	1,089	22.8	17
제주	2	1,096	600	80	7.3	0	78	7.1	0

· 주: 퇴거세대는 체납 및 기타 사유 전체 포함

· 건설교통부, 2005년 6월, 「임대주택업무편람」, 「영구임대아파트체납 및 퇴거현황」,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관리현황」

- 위 자료에서 더 살펴볼 것은 기타세대에 대한 부분임. 수급세대 못지않게 기타세대 또한 체납과 퇴거율을 보이고 있음. 영구임대아파트는 주로 저소득계층이 밀집되어 있다는 점을 미루어본다면, 차상위계층인 준빈곤층도 관리비조차 제대로 내지 못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음. 전국적으로 기타세대의 체납율이 12%이며 대전은 11.1%로 나타났음. 영구임대아파트에 사는 약 20% 이상의 세대가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으며 주거의 위험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일반적인 주거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갖추지 못한 계층, 즉 한계적 주거상황에 거주하는 비율이 23.1%(14,312천 가구)에 달하고 있음. 대전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413가구이며 20.7%에 달함.

&lt;표 10&gt; 특별시·광역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단위: %)

지 역	인 구 (천인)	가구수 (천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비율(%)			
			합 계	침 실 수 미달가구 비율	전용 부엌 및 화장실 기준 미달가구비율	중복미달 가구비율
전 국	45,985	14,312	23.1	14.6	5.2	3.3
서 울	10,373	3,086	23.5	17.5	4.6	1.3
부 산	3,812	1,120	26.7	14.9	8.7	3.1
대 구	2,540	759	26.3	14.4	9.0	2.8
인 천	2,562	747	20.8	16.2	3.1	1.5
대 전	1,409	413	20.7	13.7	5.0	1.9
광 주	1,375	408	21.8	13.4	6.4	2.0
울 산	1,044	307	29.2	17.7	7.3	4.2

· 건설교통부,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기반으로 작성, 「국민임대연구보고서」

- 이를 5개구로 세부적으로 나눠본 결과, 동구가 30.9%로 타 구에 비해 확연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미달비율이 가장 적은 유성구와는 17.7%나 차이남.

&lt;표 11&gt; 대전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단위: %)

지 역	인 구	가구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비율(%)			
			합 계	침 실 수 미달가구 비율	전용 부엌 및 화장실 기준 미달가구비율	중복미달 가구비율
합 계	1,408,809	413,758	20.7	13.7	5.0	1.9
동 구	247,539	78,545	30.9	18.3	8.7	3.9

중 구	269,300	77,990	23.9	13.8	8.4	1.7
서 구	486,575	140,589	15.4	12.6	1.9	0.9
유성구	173,509	46,418	13.2	6.7	3.2	3.2
대덕구	231,886	70,216	20.8	15.5	4.2	1.2

·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연구보고서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기반으로 작성)

### 3) 고용불안정

- 고용불안정이 특정 계층의 문제이기보다는 사회전반적인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비빈곤층에 비해 빈곤층이 임시·일용직의 비율이 월등히 높으며 이는 곧 빈곤계층에게 있어 “열심히 노력해도 좀처럼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 하는” 빈곤의 악순환으로 작용함.
- 상용직일 경우 빈곤층이 1.8%인데 반해 비빈곤층은 30.7%를 차지하며 실업자의 비율도 빈곤층은 22.4%인데 반해 비빈곤층은 4.7%로 차이를 보임.

<표 12> 근로빈곤층의 취업실태

(단위 : %)

		근로빈곤층	빈곤층*	차상위층	비빈곤층	전 체
임금노동자	소 계	43.4	32.8	53.0	64.0	61.0
	상용직	5.6	1.8	8.1	30.7	27.8
	임시직	15.3	8.1	18.3	19.7	18.8
	일용직	22.4	22.9	26.6	13.6	14.4
비임금노동자	소 계	29.7	44.7	32.5	31.6	32.6
	고용주	0.9	.8	.5	4.5	4.1
	자영업자	18.4	29.8	22.8	19.1	20.0
	무급종사자	10.4	14.1	9.2	8.0	8.5
실업자		24.2	22.4	14.5	4.7	6.4
총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자료 : 2002년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

· 주 : 빈곤층은 노인,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를 포함하여 취업실태를 나타낸 것임

- 2002년부터 2004년간 일반수급자 취업현황을 보면 상시고용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반해 비경제활동인구는 지속적인 증가율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음. 대전시의 경우 2004년 전체 평균에 비해 비경제활동인구나 실직 및 미취업자가 낮는데 반해 일일고용비

율이 13.3%로 대구 다음으로 높으며 상시고용비율은 0.9%로 평균 1.1%에 미치지 못 함.  
타 지역에 비해 취업율이 높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고용불안정은 높다고 볼 수 있음

&lt;표 13&gt; 일반수급자 취업현황

(단위: 명)

시 도	1 5 세 이 상 인 구														
	계	경 제 활 동 인 구										비경제 활동인구			
		상시고용	임시고용	일일고용	자영업	농수 축산업	실직 및 미취업								
2002	1,056,994	17,556	29,979	131,282	46,028	7,672	68,685	755,792							
비율	100.0	1.7	2.8	12.4	4.4	0.7	6.5	71.5							
2003	1,066,780	15,769	29,571	127,712	41,428	10,281	72,640	769,379							
비율	99.9	1.5	2.8	12.0	3.9	1.0	6.8	72.1							
2004	1,337,714	14,293	29,963	127,336	37,604	11,909	80,595	1,036,014							
비율	100.1	1.1	2.2	9.5	2.8	0.9	6.0	77.4							
서 울	160,100	1,925	12,492	31,135	8,529	26,001	11,619	7.3	125,719	78.5					
부 산	109,061	1,325	12,527	23,930	8,519	33,003	9,580	8.8	84,387	77.4					
대 구	75,270	869	12,197	26,105	14,561	40,005	4,759	6.3	55,497	73.7					
인 천	56,947	720	13,176	31,405	7,685	21,004	4,132	7.3	45,570	80.0					
광 주	50,142	631	13,152	30,558	11,876	86,02	4,334	8.6	37,108	74.0					
대 전	37,384	350	0.9	860	2.3	4,966	13.3	808	2.2	42	0.1	1,687	4.5	28,671	76.7
울 산	16,757	186	1.1	446	2.7	1,517	9.1	338	2.0	38	0.2	1,169	7.0	13,063	78.0
경 기	180,897	2,239	1.2	4,348	2.4	14,938	8.3	2,720	1.5	313	0.2	11,134	6.2	145,205	80.3
강 원	56,979	593	1.0	1,079	1.9	4,817	8.5	1,362	2.4	464	0.8	3,135	5.5	45,529	80.0
충 북	50,428	525	1.0	1,041	2.1	4,854	9.6	1,426	2.8	512	1.0	2,616	5.2	39,454	78.2
충 남	76,109	648	0.9	1,190	1.6	7,343	9.6	2,596	3.4	1,531	2.0	3,186	4.2	59,615	78.3
전 북	108,201	1,007	0.9	1,981	1.8	12,586	11.6	5,274	4.9	1,810	1.7	6,279	5.8	79,264	73.3
전 남	127,475	881	0.7	1,716	1.3	12,547	9.8	7,547	5.9	3,878	3.0	5,246	4.1	95,660	75.0
경 북	117,265	1,340	1.1	2,149	1.8	10,902	9.3	4,316	3.7	2,113	1.8	4,916	4.2	91,529	78.1
경 남	95,605	838	0.9	1,869	2.0	7,760	8.1	3,553	3.7	911	1.0	5,457	5.7	75,217	78.7
제 주	19,094	216	1.1	566	3.0	2,006	10.5	343	1.8	91	0.5	1,346	7.0	14,526	76.1

· 주: 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를 반올림함.

· 보건복지부, 2005년 07월, 「200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II. 노동

### 1. 실업률

- 2004년 8월부터 2006년 2월 동안의 전국 경제활동인구는 별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업률이 미세하지만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나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38.9%를 육박하고 있음.

<표 14> 경제활동인구총괄

(단위 : 천명, %)

	15세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실업률
				취업자	실업자			
2004.8	37,771	23,229	61.5	22,381	847	14,541	38.5	3.6
2005.2	38,010	23,074	60.7	22,085	988	14,936	39.3	4.3
2005.8	38,428	23,689	61.6	22,846	842	14,738	38.4	3.6
2006.2	38,592	23,365	60.5	22,412	953	15,226	39.5	4.1
평균		61.1					38.9	3.9

- 주: 15세 이상 인구 중 군인, 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 형이 확정된 수감자, 외국인등은 제외됨.  
· 통계청, 2006년, 경제활동인구

- 대전의 경제활동인구추위를 살펴본 결과, 전국적 수치에 비해 경제활동인구율은 58.2%로 낮고 실업률은 4.7%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2005년 2월과 2006년 2월의 변동사항을 비교해보면, 15세 이상 인구가 1년 사이로 2만 명이 증가하였음. 그러나 이 중 1만 명만이 취업을 하고 나머지는 1만여 명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았음.

<표 15> 대전시 경제활동인구현황

(단위 : 천명/%)

	15세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실업률
				취업자	실업자			
2004.8	1,136	675	59.4%	647	28	462	40.9%	4.1%
2005.2	1,145	662	57.8%	628	34	482	42.1%	5.1%
2005.8	1,158	671	57.9%	641	30	487	42.1%	4.5%
2006.2	1,165	672	57.7%	638	34	493	42.3%	5.0%
평균		58.2%					41.9%	4.7%

- 주: 15세 이상 인구 중 군인, 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 형이 확정된 수감자, 외국인등은 제외됨.  
· 통계청, 2006년, 경제활동인구

- 대전시의 실업률 심각성은 지역별 차이를 통해 더욱 드러남. 서울이 4.6%로 가장 높았으

며 그 다음으로 인천과 함께 대전이 4.4%로 실업률 2위를 차지했음.

<표 16> 광역시별 실업률 현황

(단위 : 천명, 실업률-%)

시기	2005.10	2005.09	2005.08	2005.07	2005.06	실업률
계	870	870	843	888	878	3.6
서울특별시	241	240	231	238	237	4.6
부산광역시	78	70	67	78	75	4.2
대구광역시	51	47	51	53	45	4.0
인천광역시	52	54	55	57	57	4.4
광주광역시	27	27	26	26	27	4.1
대전광역시	27	30	30	30	29	4.4
울산광역시	15	18	18	19	17	3.6
경기도	209	217	196	211	214	3.9
강원도	11	11	12	12	11	1.6
충청북도	14	15	14	15	16	2.1
충청남도	24	23	20	20	24	2.1
전라북도	19	19	19	20	19	2.2
전라남도	21	22	21	24	22	2.3
경상북도	36	35	37	38	35	2.6
경상남도	40	35	38	41	43	2.5
제주도	6	7	8	8	8	2.7

· 통계청, 2005, 광역시별 실업률 현황

※ 표 15와 표16의 실업률 비율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평균치를 낸 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2. 비정규직의 증가

- 비정규직은 고용불안정으로 언제든지 실업자로 전락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있으며 임금 차별, 노동조건 차별, 그리고 사회보험 혜택 미비로 “아무리 일을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근로빈곤층으로 분류되기도 함.

- 노동부자 비정규직에 대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정부와 노동계(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가 비정규직의 범위설정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노동계는 비정규직 범위를 ①고용형태상 분류에 따른 비정규직 규모 『A+B』(정부기준)에 ②경찰부가조사에서 고용형태는 정규직으로 분류되나, 경찰인구 본조사에서 종사상 지위가 임시직·일용직으로 분류되는 근로자 『C』를 합한 것으로 파악

※ 정부(A+B) : 5,483천명(36.6%), 노동계(A+B+C) : 8,404천명(56.1%)



&lt;그림 2&gt;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의 고용형태상 분류

구분	비정규직			정규직	소계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상용직	A(1,361천명)			D(6,565천명)	7,926천명
임시직	B(4,122천명)			C(2,921천명)	7,043천명
일용직					
소계	5,483천명(36.6%)			9,486천명(66.4%)	

- 주: 정부기준과 노동계(김유선) 기준을 쉽게 비교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와 노동계의 개념 차이로 실제 현황은 약간의 차이가 있음
- 노동부, 2005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분석

- 종사상지위별취업자 현황의 임금근로자가 취업자 전체 중에 67.4%로 1천 5백만 명으로 나타났다.
- 비정규직의 규모를 노동계처럼 세부적인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비정규직의 대표적 집단이라 할 수 있는 임시근로자+일용근로자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취업자의 31.5%로 7백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임금근로자를 전체로 보았을 경우 46.8%를 차지하고 있음.

&lt;표 17&gt; 전국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현황

(단위 : 천명, %)

구분	2006.02.		2006.01.	2005.12.	2005.11.	2005.10.
계	22,412	100.0%	22,471	22,699	23,191	23,186
비임금근로자	7,314	32.6	7,285	7,426	7,756	7,849
자영업주	5,993	26.7	5,963	6,072	6,221	6,260
- 고용주	1,623	7.2	1,629	1,673	1,683	1,686
- 자영자	4,370	19.5	4,334	4,399	4,538	4,574
무급가족종사자	1,321	5.9	1,322	1,355	1,535	1,589
임금근로자	15,098	67.4	15,187	15,273	15,436	15,336
상시근로자 (상용+임시)	13,016	58.1	13,054	13,125	13,080	13,112
- 상용근로자	8,031	35.8	8,030	7,978	7,971	8,004
- 임시근로자	4,984	22.2	5,025	5,147	5,109	5,109
일용근로자	2,083	9.3	2,132	2,148	2,355	2,224

· 통계청, 2006. 경제활동인구총괄

- 2003년 1월에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추계인구의 변경과 연령계층별 승수의 적용으로 2002년 12월 이전의 자료가 변경되었음

<분류 주석(J)> - 취업자 = 비임금근로자 + 임금근로자 / - 비임금근로자 = 자영업주 +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주 = 고용주 + 자영자 / - 임금근로자 = 상시근로자 + 일용근로자  
 - 상시근로자 = 상용근로자 + 임시근로자

- 대전시 임시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전체 취업자 대비 34.5%로 2십2만 명의 비정규직이 존재함. 또한 전국 평균 31.5%에 보다 3% 높게 나타났으며 부산, 서울, 인천 다음으로 4위를 차지하였음.
- 그러나 임금근로자 대비 비율은 46.6%로 0.2% 작게 나왔음. 이는 대전지역 임금근로자가 전국 평균에 비해 좋은 편이나 **불안한 비정규직의 비율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음.**

&lt;표 18&gt; 시·도별 임시근로자+일용근로자 현황

(단위 : 천명, %)

구분	2006.02.			2006.01.	2005.12.	2005.11.
	천명	%		천명	천명	천명
서울특별시	4,862	100.0		4,897	4,938	4,960
비임금근로자	1,341	27.58		1,356	1,370	1,385
상용근로자	1,696	34.9		1,707	1,685	1,671
임시근로자	1,290	26.5	37.5	1,295	1,350	1,338
일용근로자	535	11.0		539	533	566
부산광역시	1,623	100.0		1,625	1,631	1,651
비임금근로자	468	28.8		475	479	478
상용근로자	525	32.3		513	511	519
임시근로자	453	27.9	38.7	456	463	465
일용근로자	176	10.8		182	178	189
대구광역시	1,161	100.0		1,175	1,192	1,188
비임금근로자	379	32.6		382	397	398
상용근로자	412	35.5		411	396	395
임시근로자	260	22.4	32.0	265	274	269
일용근로자	112	9.6		118	125	127
인천광역시	1,199	100.0		1,186	1,196	1,219
비임금근로자	321	26.8		316	326	330
상용근로자	442	36.9		435	432	438
임시근로자	323	26.9	36.3	327	331	329
일용근로자	113	9.4		107	108	122
광주광역시	604	100.0		608	617	627
비임금근로자	179	29.6		180	180	183
상용근로자	226	37.4		231	236	238
임시근로자	149	24.7	33.0	145	148	148
일용근로자	50	8.3		52	53	59
대전광역시	638	100.0		641	645	661
비임금근로자	166	26.0		164	165	172
상용근로자	252	39.5		249	250	250
임시근로자	152	23.8	34.5	152	153	155
일용근로자	68	10.7		76	77	84
울산광역시	484	100.0		483	492	500
비임금근로자	109	22.5		108	111	109
상용근로자	249	51.4		248	251	254
임시근로자	98	20.2	26.2	94	95	98
일용근로자	29	6.0		32	35	40
경기도	4,991	100.0		5,011	5,019	5,104

비임금근로자	1,409	28.2		1,417	1,425	1,500
상용근로자	2,045	41.0		2,035	2,020	2,014
임시근로자	1,125	22.5	30.8	1,139	1,146	1,127
일용근로자	413	8.3		420	428	464
강원도	607	100.0		610	646	690
비임금근로자	236	38.9		235	246	277
상용근로자	223	36.7		222	218	218
임시근로자	103	17.0	24.4	103	116	114
일용근로자	45	7.4		49	66	81
충청북도	650	100.0		632	645	694
비임금근로자	240	36.9		219	224	263
상용근로자	226	34.8		227	223	222
임시근로자	126	19.4	28.3	127	136	134
일용근로자	58	8.9		59	63	75
충청남도	898	100.0		883	882	944
비임금근로자	390	43.4		381	384	430
상용근로자	289	32.2		285	288	286
임시근로자	134	14.9	24.5	131	127	127
일용근로자	86	9.6		85	83	102
전라북도	784	100.0		779	798	842
비임금근로자	338	43.1		325	336	371
상용근로자	239	30.5		241	242	242
임시근로자	132	16.8	26.5	133	138	136
일용근로자	76	9.7		79	82	94
전라남도	894	100.0		911	923	942
비임금근로자	480	53.7		494	503	505
상용근로자	218	24.4		217	220	218
임시근로자	128	14.3	21.8	130	137	140
일용근로자	67	7.5		70	63	79
경상북도	1,302	100.0		1,322	1,344	1,388
비임금근로자	598	45.9		588	610	646
상용근로자	401	30.8		412	414	410
임시근로자	206	15.8	23.3	223	227	224
일용근로자	97	7.5		99	94	108
경상남도	1,434	100.0		1,431	1,446	1,488
비임금근로자	544	37.9		526	550	584
상용근로자	515	35.9		521	516	523
임시근로자	260	18.1	26.1	257	259	259
일용근로자	115	8.0		126	121	121
제주도	282	100.0		280	285	293
비임금근로자	118	41.8		119	122	129
상용근로자	74	26.2		76	77	74
임시근로자	47	16.7	31.9	46	48	46
일용근로자	43	15.2		40	39	44

· 통계청, 시도별 종사상 지위

### 3. 비정규직의 근로빈곤층화

#### 1) 임금격차

-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2004)조사 결과, 정규직을 100으로 할 때 비정규직 월임금총액은 51.9%, 시간당 임금은 53.0%로 나타났다.
-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줄어드는 이유는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정규직의 노동조건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정규직은 시간당 임금이 -7.4% 감소, 비정규직은 0.9% 증가)

<표 19> 고용형태별 월평균임금 및 인상률

(단위 : 만원, %)

	금액(만원)				격차(%)				인상률(%)		
	01년	02년	03년	04년	01년	02년	03년	04년	01-2년	02-3년	03-4년
임금노동자	125	133	147	154	73.6	73.2	72.8	73.1	6.9	10.0	5.2
정규직	169	182	201	211	100.0	100.0	100.0	100.0	7.4	10.6	4.8
비정규직	89	96	103	110	52.6	52.7	51.0	51.9	7.7	6.9	6.7
임시근로	87	94	102	108	51.3	51.8	50.5	51.2	8.5	7.9	6.1
(장기임시근로)	86	93	101	105	50.6	51.1	49.9	50.0	8.3	8.1	4.9
(기간제근로)	90	98	104	111	52.9	53.9	51.5	52.8	9.6	5.6	7.4
시간제근로	45	50	50	54	26.7	27.4	24.8	25.6	10.2	0.3	7.9
호출근로	66	79	81	84	39.2	43.4	40.0	39.7	18.9	1.9	3.9
특수고용	108	120	127	139	63.5	65.9	63.2	65.9	11.5	6.0	9.3
파견근로	101	115	110	127	59.4	63.0	54.8	60.3	13.9	-3.7	15.2
용역근로	79	85	87	92	46.3	46.8	43.2	43.7	8.4	2.3	5.9
가내근로	50	52	41	56	29.4	28.7	20.5	26.7	4.8	-21.0	36.8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계산

- 대전지역의 경우도 상용종사자와 임시일용종사자의 임금격차가 좁혀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정규직의 50%도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있음.
- 특히 2004년도 조사된 자료를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임시일용직 종사자 8천여 명이 66만원의 월급을 받고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시일용직 중 도매 및 소매업 종사자들은 상용종사자 임금대비 39.7%로 매우 큰 격차를 보임.

<표 20> 2004년 대전시 종사상지위별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월급여 차이  
(단위 : 백만원, 원, 명 /%)

구분	산업구분	2004	2003	2002
상용종사	도매및소매업	1인 월급여 100.0% 1,766,553원	100.0% 1,697,311원	100.0% 1,472,918원
		종사자수 24,985명	23,147명	24,863명
		연간급여 529,648백만	471,452백만	439,454백만
	숙박및음식점업	1인 월급여 100.0% 1,072,643원	100.0% 1,179,259원	100.0% 1,089,135원
		종사자수 10,914명	8,126명	8,417명
		연간급여 140,482백만	114,992백만	110,007백만
임시일용	도매및소매업	1인 월급여 39.7% 701,575원	-	-
		종사자수 8,398명		
		연간급여 70,702백만	-	-
	숙박및음식점업	1인 월급여 61.7% 661,515원	-	-
		종사자수 8,704명		
		연간급여 69,094백만	-	-
임시종사	도매및소매업	1인 월급여 -	57.3% 971,921원	40.4% 595,555원
		종사자수 -	3,698명	4,432명
		연간급여 -	43,130백만	31,674백만
	숙박및음식점업	1인 월급여 -	56.3% 664,141원	72.8% 793,176원
		종사자수 -	4,686명	6,236명
		연간급여 -	37,346백만	59,355백만
일용종사	도매및소매업	1인 월급여 -	36.3% 616,036원	30.0 441,402원
		종사자수 -	4,151명	4,137명
		연간급여 -	30,686백만	21,913백만
	숙박및음식점업	1인 월급여 -	52.1% 614,693원	41.9 456,375원
		종사자수 -	7,305명	8,193명
		연간급여 -	53,884백만	44,869백만

· 2004, 통계청 「시/도 산업별 연간급여액」 자료 수정

· <통계표 주석> - 한국표준산업분류 8차 개정(2000년) 기준

- 1998년 : 상품중개업 및 무역업 제외

- 1998년 : 임시종사자에 일용종사자를 포함하여 조사하였음

- 1998 ~ 2000 : 2001년 기준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 결과를 기초로 자료의 일부 내용을 보정함에 따라 2003년 11월 30일 이전에 DB에 수록되었던 자료와는 차이가 있음

## 2) 사회보험 미가입

-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2004)조사 결과, 사회보험 가입률이 정규직은 81.97%인데 반해 비정규직은 30.33%로 저조하게 나타남. 또한 정규직은 퇴직금·상여금·시간외수당 유급휴가를 81.99% 적용받지만 비정규직은 14.19%만 적용받고 있었음.

&lt;표 21&gt;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단위: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임금노동자	59.5	61.3	52.1	54.1	51.6	43.4	45.8
정규직	96.6	97.3	80.5	99.1	96.2	81.0	83.6
비정규직	30.3	33.0	29.7	18.6	16.5	13.7	16.0
임시근로	28.4	31.0	27.8	16.0	14.2	12.1	14.3
(장기임시근로)	19.8	22.2	20.0	4.8	4.9	5.1	6.6
(기간제근로)	39.7	42.5	38.1	30.8	26.3	21.2	24.4
시간제근로	2.3	3.6	3.5	2.0	1.8	1.8	1.6
호출근로	0.5	0.3	1.5	0.2		2.1	
특수고용	26.2	28.0	24.1	19.1	18.0	13.9	15.0
과건근로	62.4	65.8	63.2	54.7	46.2	34.2	43.6
용역근로	53.8	68.5	52.8	47.9	35.8	26.6	25.4
가내근로	13.5	14.6	14.0	12.9	11.1	8.8	

·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필자(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계산